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62
----------	------

발의연월일 : 2024. 11. 11.

발 의 자 : 박해철 · 박지원 · 박홍배  
추미애 · 송옥주 · 이재정  
복기왕 · 맹성규 · 김 현  
김병기 · 허성무 · 이광희  
김남근 · 김 윤 · 권향엽  
최민희 · 김성환 · 강유정  
문금주 · 송재봉 · 김주영  
이병진 · 임호선 · 황명선  
의원(2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

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의4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단하면”을 “판단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수”를 “준수 등”으로 한다.

6.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이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제30조의6제1항제5호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중지  
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  
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나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  
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2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  
다.

제49조제3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다”를 “하며, 「산업안  
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9. 제30조제5항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게 불이익을 준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④ (생략)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p>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u></p> <p>2. <u>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u></p> <p>3.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u></p> <p>4.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u></p>

<p>⑤ (생략)</p> <p>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p> <p>3.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생략)</p> <p>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u>&lt;후단 신설&gt;</u></p>	<p><u>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u></p> <p>5.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u></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제1항----- ----- -----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 ----- ----- <u>판단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u></p>
--	--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  
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  
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 ③ (생략)
-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  
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  
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  
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계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이 경우 석  
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제  
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제3항-----  
-----  
-----  
-----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  
-----  
-----  
-----  
----- 준수 등 -----  
-----  
-----

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  
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  
분을 받게 된 경우

6. (생 략)

<신 설>

<신 설>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2회 -----  
-----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③ (생 략)</p> <p>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생 략)</p> <p>&lt;신 설&gt;</p> <p>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p>	<p><u>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한 경우</u></p> <p>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 <u>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u></p> <p>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 <u>를 부실하게 한 경우</u></p> <p>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 <u>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 지를 요구한 경우</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에 따라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 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 체작업감리인 변경, 감리원 현 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 의 거부·지체나 그 밖에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u></p> <p>제47조의2(벌칙) ----- ----- -----</p>
---	--

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9. (생략)

④·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0조제5항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 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p><u>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u></p>
---